

지방정부의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에 관한 실증분석*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Restoration Methods of Local Community in Local Government

- Focus on the Oil Spill Incident at Taeon -

심 문 보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박 상 규 (한서대학교 내포지역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 공동저자)

Abstract

Moon-Bo Sim / Sang-Gyoo Park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emanding methods for restoration of local communities in local government. This paper used empirical study to analysis the data that gathered from 850 residents for SPSS statistical processing. The scope of study limited to Taeon region connected to Hebei Sprit' oil Spill Incid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At the local government, it is required to carry out observation and treatment for psychological and physical health of the residents at effected area, who have not got over the shock caused by the incident. And also, it is urgen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intensify the education to raise the necessary capital for restoration of trust and order among the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including setting up the strategies to restore the damaged ecosystem and local communitie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as for the counseling service system related to repara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countermeasures shall be prepared through sufficient prior consultation and review with NGOs in the region, so that they may be used immediately in case of a similar incident.

주제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사회적 자본

Keywords: hebei sprit, oil spill incident, local government, local community, social capital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서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I. 서론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rit)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태안지역 주민은 경제적 곤란과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지역사회는 주민 상호 간, 주민과 자치단체 간, 주민과 정부 간, 주민과 사고 관련기업 간 등 불신과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마을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붕괴됨으로써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상실이라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갈등과 사회적 자본의 상실은 사고발생이전 상태의 지역공동체분위기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사고피해지역의 지역공동체를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단체,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주민보상의 제도화를 위해 보상지원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Net-Work 구성을 통해 중재역할을 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공동체회복을 위한 복원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기업은 사회적책임 이행에 따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고피해지역의 지역공동체 회복은 지역주민,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단체,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내부구성원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아무리 많은 정책적 재정적 자원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합의와 협조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해체된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요구되는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피해지역 주민 850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응답이 많은 불성실한 자료 등을 제외한 763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SPSS 1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범위로써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최대 피해지역인 태안군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1. 지역공동체의 개념

공동체의 개념에는 공동체의 가치, 참여, 협력적 행위, 아이덴티티, 그리고 내생적 자원의 활용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해야 한다(신윤창·손진아, 2010)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물리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의 유대감이 이룩되어가는 인간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에 관한 몇몇 학자들이 정의 한 개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Cook(1997)은 지역사회를 '공동생활(Life-SHaring)의 배경(Setting)이며 과정'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이 모여 있어야 하며 둘째, 사람은 제한되고 인접된 지역 내에 거주해야 하고 셋째, 역사적 유산이 공유 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사람은 공동생활 양식에 참여해야 하고 다섯째, 사람들의 통일된 의식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협동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지역공동체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김남선(2000)은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공동체 의식 관계가 의미 있게 형성되는 사회적 단위로써 일반적으로 소수로 구성된 가족이나 동료집단에서부터 지구상의 인구 절반으로 구성된 북반부와 남반부를 지칭하는 거대한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개념까지를 포함하는 복합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기곤(2012)은 지역공동체란 여러 유형의 공동체 중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공동체는 그 자체가 생활단위이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생활공동체이다. 지역공동체는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인간관계와 의식의 변화를 통해 추동된다. 지역공동체는 변화의 출발점을 주민들의 삶에 두고 그러한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하는 삶의 총체적 틀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역공동체는 자연발생적 공동체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하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재정리 한다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 사회·문화적인 연대 의식 속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이익을 위하여 서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유대관계가 형성된 집단이며 공동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집단"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기름유출사고가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지역공동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 재해의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고 주민들이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연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러브캐럴(1978), 쓰리마일(1979), 보팔(1984), 체르노빌(1986), 그리고 엑슨 발데즈호(1989)호 사건과 같은 환경재난의 경우 광범위한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사회적, 정신적, 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경우 지역사회가 병들고 사회적 공동체도 해체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엑슨 발데즈호 사건의 경우 아직도 손해배상 결론이 나지 않아 사회적 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슨 발데즈호 사건으로 코르도바 시민 중 알코올 및 마약 중독이 늘고 어부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어 사고 이후 어민가족의 30%가 도시를 떠났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주민들간의 반목과 불신으로 지역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생활고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주민이 발생하였고, 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을 등지고 외지로 나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박재묵, 2008).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평성이 결여된 배·보상 등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들은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수반되며 이는 곧 지역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1995년 여수인근에서 Sea prince호가 좌초되어 대형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들은 활발하지 못한 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매우 신속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으나 사고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확산되어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복구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른 언론의 포커스가 집중되었고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2008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정부에서 관심이 최고조로 집중돼 있던 시기적 상황과 함께 사고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정책적 연구효과를 높인다는 유리하다는 연구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연구의 분야는 사회학(박재묵 2008, 이시재 2008, 홍덕화·구도완 2009, 노진철 2008, 2009, 2010, 박순열·홍덕화 2010, 김도균 2010), 행정학(이재은 2008, 양기근 2009, 2010, 김검훈 2009) 심리학(김교현 외, 2008, 2009) 등 사회과학 전 분야의 연구가 사고 이후 3년간 집중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그간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지역공동체 관련 연구는 주로 지방자치 또는 지역정치의 관점(김현조 2009)과 공동체와 지역주민의 참여(차경은 2010, 양덕순·강영순 2003), 및 지역공동체 형성 모델(강은숙 2003, 배응환 2003) 등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체에 관한 외국의 연구로는 (Well 1996, Nalbandian 1999, Haque 2001, Master·Beaton·Smith 1988) 등이 있다고 신윤창·손진아(2010)의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다. 2007년 이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관련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길병욱 외(2008)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를 지역주민에 대한 실증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갈등에 대한 관리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을 지역적 차원, 광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양기근(2009)은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 모색에서 재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형성의 중요성과 민간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기업 등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의 논문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재난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재난취약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지역맥락 접근, 거버넌스 전략, 지역사회 중심 접근 측면에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배정환(2009)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발생되고 있는 지역갈등 현상에 주목하면서 주민들의 심리적 반감 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주민들의 삶의 지속성 관점에서 가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고유 브랜드 가치보존과 함께 이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과 자율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공동체들이 이를 스스로 수용하고 개선하는 노력의 필요성 등 전략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관(2012)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을 두 가지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형성 전략의 적용이며, 둘째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역공동체란 물질 풍요와 사회구조의 평등실현 뿐만 아니라 성숙된 관계를 이끌

어가는 건전한 사고의 각성이 어우러져서 성립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4. 분석의 틀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연구들은 사고이후 2-3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사회학적 측면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과 보건학·심리학 측면에서 주민건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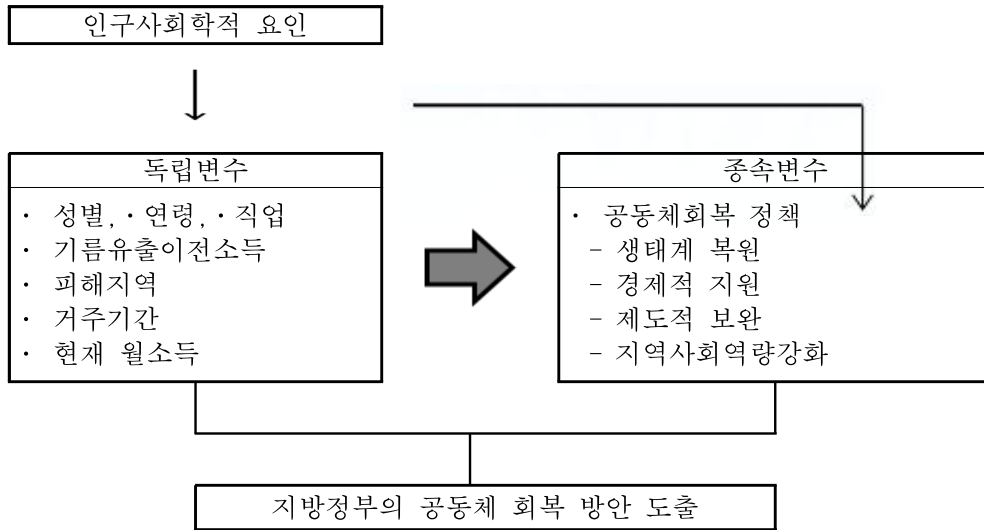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보건학·심리학 측면보다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이며 종속변수는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요인들이다.

독립변수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은 성별, 연령, 기름유출이전소득, 피해지역, 거주기간, 직업, 현재 월소득 등이다. 지역공동체 회복에 대한 독립변수들 간의 차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피해지역은 유류오염사고 시 피해 정도에 따라 고 피해지역(근흥, 소원, 원북, 이원), 저 피해지역(안면, 고남, 남), 최저 피해지역(태안)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정책요인들은 생태계복원, 경제적 지원, 제도적 보완, 지역사회역량강화 등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태복원정책 요인은 청정해안 복원, 어장환경 개선, 해안침식등 유실방지, 생태공원 조성 등을, 경제적 정책요인은 고용창출 확대, 수산관련 보조금 지원강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피해주민들의 최저생계비 지원대책 등이 해당된다.

제도적 정책요인은 재난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 확립, 정보의 공개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완벽한 복구시스템 구축, 갈등발생시 주민을 위한 협상시스템 마련 등이며, 지역사회 역량강화 정책요인은 주민상담 서비스 지원강화, 보건과 건강서비스 지원확대, 건강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1〉 분석의 틀

Ⅲ.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증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763명중에서 남자가 567명으로 74.3%를 차지해 남자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50대가 35.4%로 가장 많고, 다음 40대 28.2%, 30대 14.5%순으로 나타났다. 태안군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응답자의 42.1%인 321명이 40년 이상 거주해 오고 있는 것으로 답했고, 30-39년 16.3%, 20-29년 17.3%로 응답자 대부분이 태안군 지역에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응답자 직업분포는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 농업(24.8%), 식당(10.5%)로 나타났고, 어업선, 양식업, 맨손어업 등 어업관련 종사자는 161명인 21.1%였다. 피해지역 변수와 관련해서 고 피해지역(근흥, 소원, 원북, 이원)34.1%, 중 피해지역(안면, 고남, 남) 29.4%, 저 피해지역(태안) 36.6%를 보이고 있다. 소득관련해서는 유류오염 사고 이전의 경우 월 소득이 200~299만 원 이었다는 응답자가 34.7%로 가장 많았고, 현재의 경우 월 소득이 100~199만 원이라는 응답자가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자 역시 2007년 사고이전 27.8%에서 19.4%로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득의 변화는 유류오염 사고 이외의 시장 경제적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지역소득 감소에 크고 적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67	74.3%	거주 기간	9년이하	85	11.1%
	여자	196	25.7%		10-19년	101	13.2%
	소계	763	100%		20-29년	132	17.3%
연령	20대	22	2.9%		30-39년	124	16.3%
	30대	111	14.5%		40년 이상	321	42.12%
	40대	215	28.2%		소계	763	100%
	50대	270	35.4%	직업	농업	189	24.8%
	60대 이상	145	19.0%		어업	161	21.1%
	소계	763	100%		서비스업	121	15.9%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99만원 이하	78	10.2%		공무원 및 회사원	235	30.8%
	100-199만원	208	27.3%		무응답	57	7.5%
	200-299만원	265	34.7%		소계	763	100%
	300-399만원	136	17.8%	현재 월소득	99만원 이하	166	21.8%
	400만원 이상	76	10.0%		100-199만원	240	31.5%
	소계	763	100%		200-299만원	209	27.4%
피해지역 ¹⁾	저피해지역	279	36.6%		300-399만원	109	14.3%
	중피해지역	224	29.4%		400만원 이상	39	5.1%
	고피해지역	260	34.1%		소계	763	100%
	소계	763	100%				

2. 지역공동체에 복원을 위한 추진정책

1) 생태복원 정책

기름유출로 훼손된 지역공동체회복을 위한 생태계복원관련 시책에 대한 피해지역별 인식은 청정해안조성(F=13.91, p<0.001), 어정환경개선(F=10.48, p<0.001), 생태계 조성(F=4.22, p<0.05)등 분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해안침식 및 유실방지활동(F=1.73, p>0.05)에 대해서는 피해지역 주민 간 일치된 시각을 나타냈다.

1) 저피해지역: 태안읍, 중피해지역: 안면읍, 고남면, 남면, 고피해지역: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리

〈표 2〉 피해지역별 생태복원 시책의 중요도 인식

구 분	지역	n	M	SD	F	p
청정해안 조성	최저피해	279	4.60	.670	13.91	.000 ***
	저피해	224	4.22	.925		
	고피해	259	4.42	.815		
어장환경 개선	최저피해	279	4.61	.670	10.48	.000 ***
	저피해	224	4.30	.856		
	고피해	260	4.40	.782		
해안침식 등 유실 방지	최저피해	279	4.03	.873	1.73	.177
	저피해	224	3.96	.988		
	고피해	260	4.12	.916		
생태공원 조성	최저피해	279	3.97	.940	4.22	.015 *
	저피해	224	3.83	1.052		
	고피해	260	4.10	1.020		

* $p < 0.05$, *** $p < 0.001$

(1) 청정해안 조성

주민특성의 요소에 따른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청정해안 조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 직업이 $F = 14.669$ ($p = 0.000$)으로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성별, 연령, 월소득 및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은 청정해안 인식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청정해안 조성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14	-0.002	0.269	0.604
연령	0.029	-0.025	0.102	0.750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004	0.003	0.001	0.976
현재 월소득	0.143	0.350	0.846	0.430
직업	0.232	0.704	14.669	0.000
피해지역	0.067	-0.022	0.448	0.504
태안군 거주기간	0.056	-0.007	0.532	0.588

$R^2 = 0.073$ $adj R^2 = 0.059$

(2) 어장환경 개선

주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어장환경 개선과 관련된 중요도 인식과 주민의 특성요소에 대한 관련성 분석 결과 직업이 $F = 7.509$ ($p = 0.000$)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

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 기타 성별, 연령, 월소득 및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은 어장환경개선의 중요도 인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어장환경개선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15	0.011	0.248	0.619
연령	0.027	-0.023	0.083	0.920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047	0.092	0.248	0.862
현재 월소득	0.134	0.340	1.088	0.337
직업	0.153	0.373	7.509	0.000
피해지역	-0.091	0.197	0.765	0.382
태안군 거주기간	0.059	0.010	0.543	0.581

$R^2=0.073$ $adj R^2= 0.054$

(3) 해안침식 유실방비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해안침식 유실방지 등 생태복원 시책에 대한 중요도와 주민특성요소에 대한 분석결과 유의수준 0.05하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해안침식 등 유실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요소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5〉 해안침식 등 유실방지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21	0.008	0.375	0.540
연령	0.101	0.255	2.938	0.020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141	0.055	1.796	0.146
현재 월소득	-0.222	0.656	2.011	0.091
직업	0.073	-0.037	1.142	0.331
피해지역	0.019	0.022	0.102	0.750
태안군 거주기간	0.031	0.040	0.173	0.841

$R^2= 0.045$ $adj R^2= 0.020$

(4) 생태공원 조성

생태공원 조성시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하에서 연령대 높을수록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였고, 피해가 심한 지역일수록 해당 시책에 대한 중요도를 크게 인식하였다. 한편 직업은 유의수준 0.01하에서 생태공원 조성과의 관련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하여 직업(0.572)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고, 다음 연령(0.097), 피해지역(0.088)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생태공원 조성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21	0.009	0.467	0.495
연령	0.104	0.097	2.751	0.042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064	0.033	0.266	0.850
현재 월소득	-0.143	0.162	0.926	0.336
직업	0.254	0.572	11.378	0.000
피해지역	0.100	0.088	4.090	0.044
태안군 거주기간	0.055	0.041	0.411	0.663

$$R^2 = 0.070 \quad adj R^2 = 0.052$$

2) 경제적 지원정책

피해지역별 경제적 지원책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의견은 수산관련 보조금 및 중앙정부 지원강화(F=0.40, p>0.05)에 대해서는 피해지역별로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고용창출확대(F=5.46, p<0.01),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F=7.72, p<0.001), 피해주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F=10.18, p<0.001) 등의 시책에 대해서는 피해지역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7〉 피해지역별 경제적 지원책의 중요도 인식

구 분	지역	n	M	SD	F	p
고용창출 확대	최저피해	279	4.39	.792	5.46	.004 **
	저피해	224	4.13	.908		
	고피해	260	4.29	.878		
수산관련 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 강화	최저피해	279	4.21	.852	.40	.672
	저피해	224	4.26	.861		
	고피해	260	4.27	.920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최저피해	279	4.08	.827	7.72	.000 ***
	저피해	224	4.05	1.019		
	고피해	260	4.33	.843		
피해주민들의 최저 생계비 지원 대책	최저피해	279	3.90	.993	10.18	.000 ***
	저피해	224	4.11	1.074		
	고피해	260	4.29	.912		

** p<0.01, *** p<0.001

(1) 고용창출 확대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창출확대 시책에 대한 중요도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하에서 기름유출 이전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도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 역시 $F=5.149(p=0.002)$ 로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고용창출 확대에 대하여 보다 중요한 주민의 특성 요소는 기름유출이전 월소득의 중요도(important) 값이 0.799로 직업(0.212)보다 주요한 변수로 분석 되었다.

〈표 8〉 고용창출확대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14	-0.004	0.216	0.643
연령	0.109	0.062	0.869	0.352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246	0.799	6.516	0.000
현재 월소득	-0.094	-0.084	1.225	0.300
직업	0.136	0.212	5.149	0.002
피해지역	-0.018	0.013	0.033	0.856
태안군 거주기간	0.011	0.003	0.023	0.978

$R^2 = 0.062 \quad adj R^2 = 0.042$

(2) 보조금 지원강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수산관련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강화 정책과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지역주민의 특성과의 분석 결과 현재의 월소득과 직업이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나타냈고,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역시 $F=3.77(p=0.025)$ 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표 9〉 수산관련 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강화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01	0.000	0.001	0.973
연령	0.076	0.165	0.608	0.610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110	0.027	3.717	0.025
현재 월소득	-0.193	0.543	8.252	0.000
직업	0.121	0.126	7.180	0.000
피해지역	0.049	0.080	0.672	0.511
태안군 거주기간	0.043	0.060	0.398	0.672

$R^2 = 0.049 \quad adj R^2 = 0.027$

한편, 기름유출 이전 소득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의 수산관련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고, 현재 월소득의 경우 오히려 낮을수록 수산관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현재월소득의 중요도(important) 값이 0.54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직업(0.126),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0.027)순으로 분석 되었다.

(4)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대한 주민특성요소와의 관련성 분석결과 직업이 $F=4.754(p=0.003)$ 으로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고, 태안군 거주기간 역시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태안군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0.287)이 태안군 거주기간(0.181)에 비해 기반시설 중요도 인식에 보다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10〉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60	0.055	2.119	0.146
연령	0.047	0.123	0.457	0.633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014	0.018	0.009	0.926
현재 월소득	-0.060	0.146	0.120	0.948
직업	0.096	0.287	4.754	0.003
피해지역	0.077	0.190	1.600	0.206
태안군 거주기간	0.088	0.181	3.027	0.049

$$R^2 = 0.057 \quad adj R^2 = 0.040$$

(5) 최저생계비 지원

〈표 11〉 피해주민들의 최저 생계비 지원 대책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87	0.074	5.228	0.023
연령	0.042	0.054	0.525	0.665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125	0.078	2.732	0.066
현재 월소득	-0.080	0.106	1.128	0.342
직업	0.220	0.596	20.738	0.000
피해지역	0.054	0.066	1.001	0.317
태안군 거주기간	0.038	0.027	0.232	0.630

$$R^2 = 0.103 \quad adj R^2 = 0.083$$

피해주민들의 최저생계비 지원 시책에 대하여 직업 변수가 $F=20.738(p=0.00)$ 으로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였고, 성별 역시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상대적 중요도에는 직업변수의 중요도(important) 값이 0.596로 성별(0.074)보다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연령 소득 및 피해지역 및 거주기간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피해주민의 최저생계비 지원 대책의 중요성 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3) 제도적 보완정책

지역공동체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해서는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F=1.65, p>0.05$), 완벽한 재난복구시스템 구축($F=0.44, p>0.05$)과 대형사고에 따른 갈등발생 시 주민을 위한 협상시스템 마련($F=0.84, p>0.05$) 등의 제도마련에 대해서는 피해지역별로 별다른 의견차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정보공개 등 정부기관의 투명성 확보($F=8.75, p<0.001$) 측면에서는 피해지역별로 인식을 달리했다.

〈표 12〉 피해지역별 제도적 지원정책의 중요도 인식

구 분	지역	n	M	SD	F	p
재난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 확립	최저피해	279	4.43	.774	1.65	.194
	저피해	224	4.37	.769		
	고피해	260	4.49	.748		
정보의 공개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최저피해	279	3.88	.869	8.75	.000***
	저피해	224	4.08	.920		
	고피해	260	4.20	.898		
완벽한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	최저피해	279	4.28	.810	.44	.642
	저피해	224	4.27	.799		
	고피해	260	4.33	.833		
갈등발생 시 주민을 위한 협상시스템 마련	최저피해	279	4.11	.815	.84	.430
	저피해	224	4.15	.798		
	고피해	260	4.20	.959		

*** $p<0.001$

(1) 적절한 보상제도 확립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난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 확립과 관련된 인식에 대한 지역 주민의 특성과의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기름유출 이전의 월소득의 경우 $F=9.311(p=0.000)$ 으로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름유출 이전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직업

F=9.058(p=0.000)역시 재난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확립 인식에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변수 간 상대적 중요도는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0.409)이 직업(0.353)에 비해 보상제도 확립 인식에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3〉 재난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의 확립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40	0.036	1.080	0.299
연령	0.054	0.056	0.692	0.557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180	0.409	9.311	0.000
현재 월소득	-0.137	0.020	2.963	0.052
직업	0.175	0.353	9.058	0.000
피해지역	0.079	0.077	1.894	0.169
태안군 거주기간	0.048	0.050	0.355	0.552

$$R^2 = 0.053 \quad adj R^2 = 0.034$$

(2) 정보공개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기름유출사고로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대하여 연령(F=4.964, p=0.002)과 현재의 월소득(F=6.747, p=0.000)이 각각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보공개와 행정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현재의 월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월소득(0.401)이 연령대(0.2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기타 성별, 직업, 피해지역, 태안군 거주기간은 지역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행정투명성 확보의 중요도 인식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14〉 정보의 공개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61	0.024	2.577	0.109
연령	0.128	0.283	4.964	0.002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032	-0.026	0.220	0.802
현재 월소득	-0.161	0.401	6.747	0.000
직업	0.077	0.160	1.702	0.165
피해지역	0.061	0.135	1.183	0.307
태안군 거주기간	-0.072	0.022	0.564	0.569

$$R^2 = 0.086 \quad adj R^2 = 0.063$$

(3)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완벽한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인식에 대한 지역 주민 특성별 영향은 기름유출 이전의 월소득과 현재 월소득이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월소득이 낮을수록 완벽한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 지역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F=4.145(p=0.042)$ 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분석 되었다. 이들 간의 중요도(important) 값은 기름 유출 이전 소득이 3.72로 현재 월소득(0.281)과 성별(0.042)보다 높게 나타나,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름유출 이전소득 변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다.

〈표 15〉 완벽한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84	0.112	4.145	0.042
연령	0.084	0.190	2.178	0.114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190	0.372	9.656	0.000
현재 월소득	-0.216	0.281	10.766	0.000
직업	0.080	0.002	1.661	0.174
피해지역	0.020	0.016	0.071	0.790
태안군 거주기간	0.020	0.028	0.094	0.911

$R^2=0.054$ $adj R^2=0.034$

(4) 협상시스템 마련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갈등발생시 주민을 위한 협상시스템 마련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응답자 특성에 따른 관계성은 기름유출 이전의 월소득과 현재의 월소득이 각각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16〉 갈등발생시 주민을 위한 협상시스템 마련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06	0.001	0.030	0.863
연령	0.041	0.100	0.187	0.830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123	0.112	3.792	0.023
현재 월소득	-0.122	0.287	2.729	0.028
직업	0.075	0.211	2.075	0.102
피해지역	0.083	0.212	0.892	0.345
태안군 거주기간	0.047	0.078	0.296	0.587

$R^2= 0.049$ $adj R^2= 0.030$

기름 유출 이전 월소득이 높을수록 협상시스템 마련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 하였고, 반면 현재 월소득은 낮을수록 중요성을 크게 인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중요도는 현재 월소득(0.287)이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0.112)보다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지역사회역량 강화정책

갈등해결에 필요한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노력에 대한 피해지역별 인식차이에 대한 F-검증 결과는 <표 17>와 같다. 피해보상 절차 등에 대한 주민상담서비스의 강화($F=2.98, p>0.05$), 피해주민을 위한 보건 및 건강서비스 확대($F=2.49, p>0.05$)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F=1.29, p>0.05$),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 강화($F=0.24, p>0.05$) 등 모든 요소에 대하여 피해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인식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7> 피해지역별 지역사회 역량강화 시책의 중요도의 인식

구 분	지역	n	M	SD	F	p
피해보상 절차 등 주민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최저피해	279	4.14	.813	2.98	.051
	저피해	224	4.22	.806		
	고피해	260	4.32	.879		
보건과 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최저피해	279	4.29	.784	2.49	.084
	저피해	224	4.24	.761		
	고피해	260	4.39	.771		
건강한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화	최저피해	279	3.88	.876	1.29	.275
	저피해	224	3.83	.881		
	고피해	260	3.97	.97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강화	최저피해	279	4.18	.803	.24	.788
	저피해	224	4.13	.890		
	고피해	260	4.15	.938		

(1) 주민상담서비스 지원

〈표 18〉 피해보상 절차 등 주민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57	0.030	2.273	0.132
연령	0.050	0.097	0.355	0.701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132	0.067	5.990	0.000
현재 월소득	-0.198	0.452	10.030	0.000
직업	0.121	0.114	4.784	0.003
피해지역	0.099	0.212	3.334	0.036
태안군 거주기간	0.030	0.030	0.137	0.712

$$R^2 = 0.059 \quad adj R^2 = 0.037$$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피해보상 절차 등 주민상담 지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주민특성 변수의 관계에 대하여 기름 유출 월소득, 현재 월소득, 직업 변수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의미있는 영향관계를 보였다. 한편, 피해지역의 경우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였다. 기름유출 이전 소득이 높은 경우 피해보상 절차등 서비스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피해규모가 큰 지역주민일수록 이러한 서비스의 지원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월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변수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현재 월소득(0.452), 피해지역(0.212), 직업(0.114)순으로 나타났다.

(2) 보건 건강 서비스 지원

보건 및 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지역주민 요소와의 관계에 대하여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F=13.923, p=0.000), 직업(F=4.473, p=0.004)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였고, 현재 월소득(F=3.800, p=0.010) 피해지역(F=3.473, p=0.032)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이 많을수록 보건과 건강서비스 지원확대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고, 피해가 큰 지역주민 일수록 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 상대적 중요도는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0.400), 직업(0.185), 피해지역(0.169), 현재 월소득(0.076)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다.

〈표 19〉 보건과 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67	0.071	2.695	0.101
연령	0.052	0.051	0.489	0.690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187	0.400	13.923	0.000
현재 월소득	-0.138	0.076	3.800	0.010
직업	0.148	0.185	4.473	0.004
피해지역	0.111	0.169	3.473	0.032
태안군 거주기간	0.053	0.051	0.636	0.530

$$R^2 = 0.053 \quad adj R^2 = 0.029$$

(3)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건강한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중요도와 주민특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기름유출이전 월소득($F=4.005$, 0.008), 직업($F=11.510$, $p=0.000$)이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련성을 나타냈다. 기름 유출이전 월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직업(0.716)변수가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0.354)에 비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건강한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22	0.009	0.593	0.442
연령	0.064	0.008	0.287	0.751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146	0.354	4.005	0.008
현재 월소득	-0.080	-0.051	0.622	0.537
직업	0.218	0.716	11.510	0.000
피해지역	0.068	-0.046	1.099	0.334
태안군 거주기간	-0.014	0.011	0.017	0.896

$$R^2 = 0.051 \quad adj R^2 = 0.032$$

(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강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삶의 질에 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주민특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직업($F=10.858$, $p=0.000$)은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련성을 나타냈고,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F=2.826$, 0.038)은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이 높을수록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삶의 질 강화를 위한 시책강화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직업 (0.671),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0.227)순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강화에 대한 인식에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냈다.

〈표 2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강화

구 분	계수	Important	F	p-value
성별	0.005	-0.001	0.023	0.880
연령	0.062	0.012	0.882	0.450
기름유출 이전 월소득	0.096	0.227	2.826	0.038
현재 월소득	-0.035	-0.050	0.237	0.789
직업	0.198	0.671	10.858	0.000
피해지역	-0.031	0.055	0.223	0.637
태안군 거주기간	0.082	0.086	0.927	0.336

$$R^2 = 0.049 \quad adj R^2 = 0.030$$

IV.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

1. 생태계 복원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생태계복원과 추진시책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청정해안의 조성, 어장환경 개선 등을 중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통하여 오염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현안문제는 해당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유류사고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오염현황 조사와 복원계획 수립 역시 해당 지방자치체인 태안군에서 종합적인 Road Map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태안군에서 정확한 조사 없이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조사와 복원 등 일련의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고, 복원계획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등에 의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태계 복원사업에는 사고 기업으로서 삼성도 적극 참여하여 사고의 직접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중재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오염사고와 지역갈등으로 훼손된 지역공동체는 물리적 형식적으로 재형성한다고

하여 지역공동체가 사고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노력과 서로의 교류를 통한 신뢰의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단계적으로는 검토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첫째,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그것을 특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고유 브랜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참여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생태계 및 공동체 복원의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는 주민들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계획들의 수립과정에 지역공동체를 공동 참여시키는 등의 민주적·수평적 절차 도입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책임의식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율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배정환, 2009). 자율적 지역공동체는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합리적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시민사회·지역 언론의 협력적 구조 및 연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석에서 보여 주었듯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는 현재 월소득(0.408), 기름유출이전 소득(0.180), 피해지역(0.179), 직업(0.166)순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유류피해에 따른 소득의 변동 폭과 물질적·정신적 피해정도 이외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느끼는 유류피해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민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사회자본이 풍부해야 지역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양기근(2009)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형성에 있어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 또는 특성이며,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상호작용 및 연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효과적인 활용은 재난지역 공동체의 갈등 대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태안지역의 갈등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이 생계비 지급, 방제작업 등과 관련하여 야기된 주민 상호간의 불신으로 주민들은 이웃주민 간은 불

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시킬 책임이 있는 집단에게 조차도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간의 불신상황에서 지역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던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이었고 평소의 이웃이 적대적 상황으로 변하고 오로지 '나' 위주로 생각하는 지역공동체의 분열상황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허약해진 사회적 자본을 재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그룹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주민들 간에 인식되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갈등이나 협상에 대처하는 비공식적 합리적 규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며, 갈등의 상대자에 대한 매너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등도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모두가 배워야 할 사항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나와 가치를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 양보하고 합의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법을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계속되는 지역 간, 계층 간, 주민 간 갈등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육의 방법은 공동체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평생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선 공동체의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가칭 「지역리더반 교육」 등을 상설화(주 1회 정도)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시킬 경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피해 배·보상과 관련한 상담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역량강화 시책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보건과 건강서비스 지원확대 및 피해보상 절차 등 주민상담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박상규·심문보, 2013). 태안 기름유출 사고 시 피해주민들은 각 피해대책위원회별로 손해 사정사를 선임하여 피해배상 신청서 작성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IOPC 측의 피해에 대한 당사자 입증주의, 무허가·무면허 어업에 대한 배상 불허 등 자체보상 메뉴얼에 의하여 어업종사자들은 우리나라 어업의 관행상 정당한 배상을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였고 특히 맨손어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노인층으로 IOPC 측 조사관의 피해현황 인터뷰 시 제대로 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맨손어업의 경우 IOPC의 사정률이 평균 7.9%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 이에 따른 피해주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피해배상체계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태안남부수협 피해대책위원회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부수협직원

들은 직접 발로 뛰어 서베이어 역할을 담당했고, 배상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입증자료 준비, 인터뷰 요령 교육에 까지 피해주민들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평균 사정률이 18.4%로 수산분야에서 타 피해대책위의 평균 사정률 6.3%의 3배 가까운 사정률을 보였다.

따라서, 이후 재난사고 등 발생 시 피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알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중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상담 등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서비스 지원은 법적 제한이나 기술적 면에서 행정조직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이 경우 지역시민사회 주관으로 법률 전문가나 관련업무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해 주는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2007년 12월 7일 서해안의 태안 앞바다의 유류사고는 123만 자원봉사자의 도움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배분이나 방제작업비와 관련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놓고 지역공동체에 이어져온 질서나 신뢰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나' 위주의 생각하는 제로섬(zero-sum) 상황에서 공동체의 균열과 해체를 가속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체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분석한 대안의 하나로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청정 해안조성, 고용창출 확대, 재난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 보건과 건강 서비스 지원 등을 피해주민들은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과제와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지역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천식 등 유병률이 일반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등 사고에 의한 건강 위험요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갈등과정에서 훼손된 지역공동체 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적 자본 육성과 교육훈련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완전한 복구까지는 이십 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장기적 차원에서 완벽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의 형성 계획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류피해에 대한 배·보상청구 과정에서 절차 등을 알지 못하여 이중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상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갈등으로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나 무엇보다 훌륭한 대안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단체, 언론, 관련 기업 등 다차원적인 참여주체들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곤. (2012). 지역공동체, 이상과 현실 그리고 과제들, 광주발전연구원, 「광주연구」, 18: 1-20.
- 김겸훈.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피해지역의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 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147-175.
- 김남선 외. (2000).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0(2): 1-30.
- 김교헌·권선중.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대안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환경사회학연구」, 12(1): 83-107.
- 김대건. (2011). 지역공동체의식이 협력적 갈등해결행태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9(1): 67-93.
- 김도균. (2010). 환경재난과 지역사회의 변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어촌마을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 비교,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도균·박재묵. (2012).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실패와 재난 복원력의 약화: 관련 행위자들 간의 이해와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환경 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16(1): 7-43.
- 김선희. (2011). 국내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행정공제회, 「지방행정」, 694: 30-33.
- 길병욱·최병학 외. (2008). 서해안지역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충남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1-200.
- 김현조. (2009). 「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노진철.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환경사회학연구」, 12(1): 43-82.
- 목진용. (2009). 유류오염 손해배상 및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병춘. (2012).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공동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20(4): 1-26.
- 박성준. (2009).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 연구: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순애 외. (2009). 주민참여와 성과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연구: 허베이 스피리트

- 호 유류유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2): 145-165.
- 박순열·홍덕화. (201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의 사회경제적 변동: 사회적 재난의 파편화와 사회화, 『공간과 사회』, 34: 142-184.
- 박재묵.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12(1): 7-42.
- 박종관. (2012).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보』, 12(7): 183-193.
- 박상규. (2013). 대형 재난지역의 갈등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2007 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규·심문보. (2008). 지방정부의 지역갈등 양상에 대한 실증연구: 200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5(1): 105-133.
- 배응환. (2003). 지역공동체의 지방 거버넌스 모형: 충남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3): 59-89.
- 배정환. (2009). 살기 좋은 태안 건설을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전략 및 방향, 2009 한국공공행정학회 「동계기획세미나 자료집」: 105-141.
- 신윤창·손진아. (2010). 지역발전이론의 비판적 이해와 지역공동체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14(1): 217-244.
- 양기근. (2009).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보』, 9(5): 243-256.
- _____.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의 재난지역 공동체의 재난대비 강화 방안: 지속가능 재난관리를 위한 사회적자본 형성전략, 『한국방재학회지』, 9(35): 54-60.
- _____. (2010). 재난 이후의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 한국공공행정학회, 『공공행정연구』, 11(2): 69-87.
- _____. (2011).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전략: AHP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2): 73-96.
- 양덕순·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 유현정·이재은. (201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후 직업별 관점에서 본 태안지역사회의 삶의 질 문제, 『한국위기관리논집』, 6(3): 63-85.
- 윤순진.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자원봉사자 연구: 참여동기와 사건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12(1): 145-179.
- 이시재.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 영향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12(1): 109-144.
- 이병기 외. (2010). 위험거버넌스(Risk Governance) 관점에서 본 해양오염사고의 재난관리행태 분석: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4): 353-377.
- 이왕권. (2005). 지역공동체 조성과 민관협력, 『국토』, 288: 19-26.

- 이재은·유현정. (201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위기관리논문집」, 6(2): 51-75.
- 이종수. (2012).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 지방행정연구소, 「자치행정」, 291: 10-12.
- 이주호 외. (201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의 갈등구조 분석: 협력의지에 미치는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이평주.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 생태계 피해 및 복원과 향후과제,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7-83.
- 이한재. (201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의 갈등구조 분석,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대욱 외. (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467: 1-241.
- 정광용. (2012).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정책방안,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광용·이승환. (2012).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연구」, 19(6): 205-211.
- 정대흠. (2013).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세미나: 11-13.
- 정종관. (2011).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환경피해액 산정비교 및 환경복원 사업발굴, 충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180.
- 차경은. (2010).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의 행정참여 개선방안.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산·관·학·연의 역할」. 한국비교정부학회 외 「학술대회 자료집」.
- 채혜원·홍형욱. (2002).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33-44.
- 한상일. (2010).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발전, 「창조와 혁신」, 3(1): 225-248.
- 홍덕화·구도완.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환경사회학연구」, 13(1): 605-622
- 현혜경. (2003). 역사적 경험, 전통의 재해석, 지역공동체의 복원,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학술대회 자료집」: 597-605.
- Brusco, Sebastiano. (1982). The Emilian Model: Productive Decentral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6.
- Cooke, P. (1997). Institutional Reflexivity and the Rise of the Regional State. In G Benko and U. Strohmayer(eds.). *Space and Social Theory: Interpreting Modernity and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 Haque. M. S. (2001).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Public Service under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1): 65-82.
- Henry, N. & S. Pinch. (2001). Neo-Marshallian Nodes, Institutional Thickness and Britians Motor Sport Valley: Thick or Thin?. *Environmental and Planning A*, 33.

- Master, C., Beaton, R., & Smith, K. (1988). *Setting the Stage for Sustainability*. Lewis Publisher.
- Nalbandian, J. (1999). Facilitating Community, Enabling Democracy: New Roles for Local Government Manage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9(3): 187-197.
- Weil, M. O. (1996). Community Building: Building Community Practice. *Social Work*, 41(5): 481-500.

접수일(2013년 10월 30일)

수정일자(2013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 29일)